

與 “국난극복” vs 野 “야당의 시간”

국감 오늘부터 20일 열전...국방위, 증인 채택 놓고 기싸움 재정 건전성·독감 백신·한국판 뉴딜 등 치열한 공방 예고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7일 시작돼 20일간의 열전을 돌입한다. 특히 서해상 공무원 피살사건과 추미에 법무부 장관 아들들의 군 시절 특혜 의혹을 다룬 국방위 등 일부 상임위에서는 증인 채택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는 등 여야의 극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다.

국감 시작을 하루 앞둔 6일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 속에 치러지는 이번 국감을 민생 국감으로 규정, 무분별한 정치 공세에 사전 방어막을 치고 나섰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감대책회의에서 “이번 국감은 국난극복, 민생, 미래전환, 평화를 4대 중점으로 정했다”며 “21대 국회의 첫 국감이 허위와 폭로로 얼룩진 막장, 정쟁 국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감 기간 매일 상황점검회의를 여는 한편 화요일 원내대책회의를 국감대책회의로 대체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낱알이 드러내겠다고며 전방위 공세를 예고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감이 진행되는 20일간의 야당의 시간”이라며 “상임위 간사들이 중심이 돼서 국정 난맥상과 정부 실정을 국민에게 적나라하게 알려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24시간 종합상황실을 가동하고, 제보센터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실정 사례를 취합할 예정이다.

이번 국감의 최대 격전지는 공무원 피살사건과 추 장관 의혹을 다루는 국방위로, 증인신청부터 날카로운 신경전이 벌어지

고 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과 아들 서씨 등 10명의 일반 증인을 신청했으나, 민주당이 이를 일괄 거부하면서 일단 증인이 국감이 열릴 전망이다.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추미에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시절 특혜 의혹, 서해상 실종 공무원 피살사건 등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증인·참고인을 대거 신청했으나,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 서씨 등 10명의 증인을 신청했으나, 민주당이 모두 거부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민주당은 이날 전체회의를 소집해 국감 실시 계획서 채택을 강행했고, 국민의힘은 한기호 의원이 간사에서 사퇴하며 강력 반발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 의혹 및 수사와 관련해 서씨 등 20여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민주당이 모두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검언유착 의혹’ 수사 과정에서 육탄전을 벌인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의 재판장인 김미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증인으로 요구했으나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 등의 이유로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해서는 야당이 군의 첩보를 무분별하게 공개해 안보 문제를 초래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피살 사건의 실제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선 사망한 공무원의 형까지 불러 질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기재위에서는 경제위기 대응 과정에서 우리가 거치는 재정 건전성 문제가 복지위에서 독감백신 보급과 코로나19 방역 상황, 산자위에선 ‘한국판 뉴딜’을 둘러싸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여의도 브리핑

윤영덕 “교육부, 교과서 가격 조정 저수준 배상”

교육부의 부당한 교과서 가격조정 명령으로 초·중·고등학교 검정교과서 가격을 낮췄던 출판사들에 교육부와 일선 17개 시도교육청이 수천억원의 배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동남권) 국회의원은 6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 교육부와 출판사는 2495억원 상당의 교과서 가격 관련 분쟁 해결 협의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14년 출판사들에 초·중·고 교과서의 경우 34.8%, 고등학교 교과서는 44.4%를 인하하라는 교과서 가격조정 명령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출판사는 교육부 상대로 3555억원의 채권 최고를 했고 교육부 및 교육청과 출판사는 최종 2495억원을 2020년 3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교과서의 경우 34.8%, 고등학교 교과서는 44.4%를 인하하라는 교과서 가격조정 명령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출판사는 교육부 상대로 3555억원의 채권 최고를 했고 교육부 및 교육청과 출판사는 최종 2495억원을 2020년 3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병훈 “문화전당, 전문인력 없어 사실상 파행”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 국회의원은 6일 “아시아문화전당의 인력 ICT, 인공지능 등 미래기술 관련 분야 인력이 1명도 없고, 이를 지휘할 실무책임자들이 많지는 1년에서 적게는 수개월 동안 대부분 공석 상태가 유지되면서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이 사실상 파행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아시아문화전당은 예술과 테크놀로지, 인문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을 핵심 전략으로 운영된다. 이런 상황에서 테크놀로지 인력



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관련 인력은 전무한 상황으로서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구축 자체가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되고 있다. 이 의원은 “전당의 ACT센터 내 3개 스튜디오를 제대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인력은 확보해야 프로그램이 가동되는데, 이번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해당 인력이 전무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조오섭 “24개 이전 공공기관 인력 수도권 무단 잔류”

나주혁신도시 등지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승인 없이 인력을 수도권에 일부 잔류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북구갑) 국회의원은 6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부처별 이전 공공기관 미승인 수도권 잔류 현황’ 자료에 따르면 11개 부처 24개 이전 공공기관 1577명이 균형발전위원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수도권에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미승인 수도권 잔류인력이 가장 많은 공공기관은 한국산업기술포럼원 366



명, 한국예탁결제원 283명, 한국전력공사 150명 순으로 집계됐다. 조오섭 의원은 “이미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선정 당시 모호한 기준으로 상당수 자회사, 부설기관 등이 수도권에 남아있는 상황이다”며 “미승인 인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함께, 수도권 잔류 기준을 더 엄격하게 보완해 잔류인원을 최소화하는 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석 “남성 공무원 육아휴직 5년간 2배 늘어”

남성 공무원 육아휴직자 지난해 3384명으로 5년간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북구을) 국회의원은 6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공무원 육아휴직 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중앙부처 남성공무원이 3384명으로 최근 5년간 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부처별 남성공무원 육아휴직자 비율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15.9% (1269명), 2016년 18.9% (1526명), 2017년 22.5% (1885명), 2018년 29.0% (2652명), 2019년 33.9%



(3384명)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인사혁신처는 향후에도 증가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해양경찰청, 법무부, 국토교통부, 중소기업부, 소방청은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여성 육아휴직자 비율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양경찰청의 경우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58.7%로 여성의 비율을 넘어섰다. /오광록 기자 kroh@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필수노동자를 위한 정책 및 제도마련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 공정경제 3법 속도전 ... 노동 유연화엔 선긋기

이낙연 대표, 경총 방문 의견 청취... “두 법 연계처리 불가”

더불어민주당은 6일 ‘공정경제 3법’과 노동관계법 개정을 병행 추진하려는 국민의힘의 움직임에 대해 “별개의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노동관계법 개정을 정식 제안하지도 않았고, 어떻게 바꾸자는 것인지 안이 나와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며 “두 사안이 함께 처리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정3법과 노동법은 목표와 방향성이 완전히 다른 법이어서 논의를 하더라도 분리된 별도의 트랙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된 기류다.

국민의힘이 공정3법 협상 과정에서 ‘노동시장 유연화’ 카드를 지렛대로 삼을 가능성을 경계하는 분위기도 강하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두 법을 연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인터뷰에서 “함께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상태다.

민주당은 두 법의 연계 처리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공정3법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방문해 삼성, 현대차 등 대기업 사장단으로부터 공정3법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한정재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준비 경영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 기업이 많아지고 소비자는 더 안전해질 것”이라며 “각계각층 의견을 신중하게 검토해 꼭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 반발과 고용조건 악화 등을 우려해 노동 유연화에는 소극적인 편이다.

한 관계자는 “비대면 시대에 노동 유연성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고용 유지가 중요한데 풀어버리면 심각한 사회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아직 우리 사회 안전망이 노동 유연성을 획기적으로 풀 만큼 안정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한일의원연맹 신임 회장 민주당 김진표 의원 선출

국회 한일의원연맹은 6일 신임 회장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회장은 “과거 한국과 일본은 김대중-오부치선언을 시작으로 적극적인 교류를 이어가며 상호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며 “한일의원연맹이 서툰외교를 부활시켜 미래지향적 한일 양국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회장 겸 간사장으로는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이 선출됐다. 또 한일의원연맹은 박병석 국회의장, 민주당 이낙연 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여야 중진 의원들을 고문에 임명했다. 총 회원은 140명이다. /연합뉴스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